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음 12월 3일) 제197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형 경제 · 공동체 활성화

시,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는 올해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전주형 경제모델을 만든다.

또 주민주도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팔복·승암새마을마를 사업 등 시민들의 삶을 바꿀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도시재생 분야의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한 3대 추진 전략은 △나눔, 협력의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활성화 △우리의 가치로 신뢰 넘치는 전주형 공동체 육성 △사람·생태·문화의 가치를 살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다.

사회적 경제 정보 담은 J-SOCIAL 공식 오픈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 수립사업 가속화

특히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건설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시범사업 추진, 주민 주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 시민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분야별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사회적경제·공동체·도시재생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대표 도시로 우뚝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시는 나눔과 협력의 경제모델인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과 청년 등 사회적경제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화·사회적경제 관련 시민 동아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와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클라우드 펀딩대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적극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사회적경제 조직 14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DB를 구축, 이달 중 전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든 정보를 담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 J-SOCIAL(www.jsocial.kr)을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현재 J-SOCIAL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원리소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387개 조직 중 150개 조직에 대한 업로드를 마친 상태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홍보 및 소개, 생산품(서비스) 안내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향후 이 플랫폼을 사회적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 조직·주체, 각종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분야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 하는 등 사회적경제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마중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공유경제 활성화로 반값 생활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공유경제 정보를 확인·검색할 수 있는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지난해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Grocery sharing(식료품 공유)'과 '우리아파트 재능기부 사업' 등 전주형 공유경제 시범사업도 전개한다.

또한 올해 신뢰 넘치는 전주형 공동체 육성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온두레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 등 70여 개소를 선정·지원하는 2018년 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 노송 FM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통해 건강한 풀뿌리 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공동체를 대상으로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동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는 총 1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계획수립 3개동과 계획 실행 6개 동 총 9개 동에서 이 사업이 전개된다.

앞서 지난해 완산동과 인후2동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6개 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노송동과 진북동에서는 총 51개 제안사업을 골자로 하는 마을계획이 수립됐다. 선정된 마을계획 수립 등은 동별 20명 이상의 마을 대표와 리더로 구성된 마을계획 추진단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PM(Project Manager) 및 활동가를 배치해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끝으로 시장 핵심가치인 사람과 생태, 문화의 가치를 살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서화동 예술마을의 경우 정부 핵심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4년간 국비 97억 등 총 169억원이 투입돼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는 주거지 재생사업이 펼쳐지게 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책개량지원 △기반시설개선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공동체 육성지원사업 등으로, 시는 이를 통해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해 '전주형 주거지 재생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양도식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전주형 사회적경제는 시민주도 공동체를 집중 발굴 지원·육성하고 조직화해 호혜와 협동 안에서 어우러지는 행복경제를 실현 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주시 전부서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정부정책과 기조에 맞춰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이 하나 돼 함께 성장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노래가락에 맞춰 18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관에서 송하진 도지사,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 JTV 관계자,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7 외골와골 시장가요제 왕중왕전'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노래가락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다.

도, 지방분권 촉진 · 대응방안 마련

시군 지방분권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확대 등 계획 수립

전북도는 최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의회, 학계, 언론, 경제, 시민단체 등 분야 지방분권 전문가로 제3기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분권 촉진 추진계획 수립과 정부의 재정분권정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김승일 행정부지사, 도의

회 하남주 의원, 우석대 이병렬 교수, 원광대 김선남 교수, 전북대 김경아 교수, 전북도민일보 정재근 정치부장, 전북CBS 김용만 보도국장, 노인환 세무사, 지방분권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은애 센터장 등이 참석, 지방분권 촉진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분권추진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시군 지방분권 조례 제정,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시군 지방분권 협

의회 구성 확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동참, 지방분권 교육 및 강연, 도민분권인식 통계조사 등이다. 전북도는 재정분권에 의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우려해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공동세, 공동세)의 적극적 활용도 촉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단위 협의체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균형적인 분권정책을 건의하고, 도내 시군의 분권기반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에서 6개월 간 1만1991명 채용

앞으로 6개월 동안 전북지역에서 채용될 인원이 1만1991명으로 조사됐다.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6개월 동안 전북지역 사업체에서 채용을 계획한 인원은 1만19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0명(8.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전북지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표준사업체 1636곳을 조사한 결과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1만84명(84.1%)으로 지난해보다 1049명(11.6%)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은 1907명으로 149명(7.2%)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5619명으로 가장 많고, 직종

별로는 '건설·생산직'이 45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주지청은 전북지역 채용계획 인원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인력수급 불균형 어려움을 진단하고 있다. 정영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고용지원 정책을 연계해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전북대 의대 총동창회 "서남대 편입 의대발전 토대"

"소모적 공방은 거두고 의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서자." 최근 서남대 특별편입 문제로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대학 측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전북대 의과대학 총동창회가 우려를 표하며 단합과 협력을 강조했다. 전북대 의과대학 총동창회는 18일 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폐교 명령이 내려진 서남대 의과대학생 편입학 문제로 전북의대 교수와 학부모, 학생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의과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의대 동창회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과대학생 편입학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남대 학생과 전북대의 현재 재학생이다"며 "피해의 경중을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순위에서 향후 의료인이 되기 위한 과정 중 갑자기 의학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어진 서남대 의대생을 먼저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학생들은 향후 의료인이 될 우리의 동료이며 나아가 향후 이 나라의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이기에 우리가 나서서 이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이것이 이 나라 의료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총동창회는 서남대 편입학을 전북의대가 발전하는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재학생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를 증축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의과대학 교수를 충원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과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재학생들과 서남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북의대 총동창회도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전북의대 학생과 학부모, 서남대의 편입학 학생과 학부모, 교수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배려의 마음을 갖고 한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지 모르는 행동을 자제해 전북 의대의 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정읍시 JEONGEUP-SI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18년
戊戌年

자연·문화·역사가 살아숨쉬는...
맛있는 9곳의 정읍 九경

1. 국립공원 내장산 단풍터널
2.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 무성서원과 삼촌공원
5. 백제가요 정음사문화공원
6. 피향정 연못
7. 정음천 벚꽃길
8. 전설의 쌍화차거리
9. 백성기사의 기념관